

토론 요지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협력의 전제 조건

김 용 웅 | 전.충남발전연구원장

수도권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찬성과 반대주장은 공동선을 위한 합의기반 형성 없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만을 확대 재생산해왔다.

소모적인 찬반논쟁과 갈등의 확대는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대전·충청권이 그동안 확대되어 온 수도권과 지방간 비생산적인 경쟁과 대립을 지양하고 상생·협력의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미래 국가발전의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그동안 수도권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주장들이 양보할 수 없는 자기만의 논리와 근거를 내세워 대립과 갈등을 키워 왔다는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적 이해만을 내세우는 기존의 정책 환경의 틀을 고수한다면 공동선을 위한 해법 마련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 간 합의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찬성과 반대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수도권 정책 논리의 바람직한 판단기준은 단기적인 정책목적이나 특정집단이나 지역의 이해보다는 “세계화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 잠재력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국가발전기반의 확보”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의 편익은 일부지역 또는 사적 집단이 향유하고 사회적 비용과 희생은 타 지역이나 국민 전체로 전가하면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처럼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정의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은 각자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기능을 특화를 하여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하여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문별 산업생산, 기술개발, 시장개척, 관광 및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인 상생·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시장을 향한 전시장(front shop)과 제품생산의 배후공장(back factory) 기능으로 특화된 홍콩과 중국관동성이 기능특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상생·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밖에도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독점방지와 지역 간 공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동세 제도”(특정재산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및 “국세차등배분 제도”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자기 지역만의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일이라 할 수 있다.